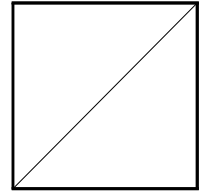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81 호	의 결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3. 30. (제 6 차)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고 승 범
제출 연월일	2022. 3. 30.

1. 의결주문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등과 관련하여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에게 직무정지 6월로 조치 요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2022.1.20.) 심의필
- 제6차 안건검토 소위원회(2022.3.24.) 심의필

<별지>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 상임이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상임이사 ○○○에 직무정지 6월

○ 조치사유

-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등 6건 위반행위

○ 법적 근거

-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제39조, 제40조, 제47조, 제83조의3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의2, 제20조의2, 제24조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제3조, 제45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제20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6조, 제52조

2. 조치사유(지적사항)

가. 「신용협동조합법」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 영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주)□□□□건설 등 XX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 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XX건(이하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차주와 체결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xx억 xx백만원을 수취하였음

나. 회계업무 부당 처리

(1)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에 기재 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 ~ 20xx.x.xx. 기간 중 ○○은행 등이 (주)□□□□건설 등 XX개 PF차주에 대해 취급한 XX건의 PF대출(총 x,xxx억원)과 관련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을 PF차주와 체결하고 동 확약서를 ○○은행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발부채가 발생하였으나,

2017년, 2018년, 2019년 및 2020년 재무제표에 각각 xxx억원, xxx억원, x,xxx억원, xxx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및 회계업무 부당 처리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채무자 단위 총자산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시 (주)□□□□□□ 등 XX개 차주에 대한 대출 XX건, xxx억 xx백만원의 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xx억 xx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부당 : xx억 xx백만원 이익 → 정당 : xx억 xx백만원 손실)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x.xx%p(부당 xx.xx%→정당 x.xx%) 과대 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하였음

다.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40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20년 중 (주)■■■■■■■ 등 XXX개 비조합원 차주에 대해 총 XXX건, x,xx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한도(x,xxx억 xx백만원)를 x,xxx억 xx백만원(2020.12월말 총대출금 x,xxx억 xx백만원의 xx.xx%) 초과하였음

라. 대출심사 소홀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초래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거래 연기약정서, 채무자 신용조사 관련 서류 등을 징구 하고

차주에 대해 신용조사, 신용평가 및 부실징후 발생여부 등을 신규여신에 준하여 심사를 하고, 신용등급이 7C+ 등급 이하의 차주에 대해서는 여신 잔액이 1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한연장이 가능한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 (1) 20xx.x.xx. 차주 (주)○○○○○에 대해 취급한 공동대출(xx억원) 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동 대출에 대한 1차 기한 연장(20xx.x.xx.)시 체결한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20xx.x.x.부터 4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하는 등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에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20xx.xx.x. 차주가 제출한 「변제확약서」만 수령한 후, 「여신업무방법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관련 일체의 서류를 받지 않고, 별도의 여신심의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기한연장 관련 심사를 하지 않고 대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다시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21.2.22.) 현재 대출 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백만원)되었음

- (2) 20xx.x.xx. ~ 20xx.x.xx. 기간 중 차주 (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X건, xx억원) 기한연장과 관련하여

20xx.x.xx. 대출(X건, x억 x백만원) 기한을 연장하면서 추가 기한연장 불가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xx.xx.xx.과 20xx.x.xx.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두 차례 대출 기한을 추가 연장하였으며

20xx.x.xx. 차주의 신용등급이 기존 5B+에서 9C로 하락하는 등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세금 체납(x천만원 추정)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였음에도 담보 가액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여신 잔액의 10% 이상을 회수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신을 기한연장(X건, xx억 x백만원)함으로써

20xx.x.xx.부터 동 여신에 대한 연체가 시작되어 검사착수일(2021.2.22.) 현재 대출 채권 중 일부가 고정화(x억 xx백만원) 또는 부실화(x억 xx백만원)되었음

마. 임직원에 대한 부당 대출취급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신탁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xx. ~ 20xx.x.xx. 기간 중 상임이사 ○○○에 대하여 □□□(○○○의 모), ◇◇◇(신탁 지점장의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본인 및 □□□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총 X건, 합계 x억 xx백만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바.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

-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부산)부산성의신용협동조합은

20xx.x.x. ~ 20xx.xx.xx. 기간 중 (주)□□□□ 등 XX개 법인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부산진구에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

< 붙임 >

관계 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 13. (생략)

제11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원은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이하 생략)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 다. 내국환
 -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 바. 어음할인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②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본다.(이하 생략)

제47조(회계 및 결산) ②조합의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계정과목 및 장부의 서식 등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83조의3(경영건전성 기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①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 직무의 정지 또는 견책
2.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
3.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이하 생략)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96조에 따라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권한을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을 포함한다)는 조합 및 중앙회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합 또는 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조합 또는 중앙회는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생략)

제16조의2(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2(경영건전성기준) 금융위원회가 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할 경영건전성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채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이하 생략)

제24조(권한의 위탁 등)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중앙회장에게 위탁한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표준규정 등) ①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한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의 업무방법(이하 이조에서 "여수신업무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이를 정한다.
②여수신업무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이율, 결산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3. 예탁금·적금 및 대출등의 원리금의 지급 및 회수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수신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①조합은 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에 따라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②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분류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제12조(건전성 비율) ①법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2이상
2. 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이하 생략)

제15조의2(회계기준등) ①조합은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이 규정 및 금융위가 정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별표 1-2 >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적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거래소 공시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동산등	대지 건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등 기계,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국토교통부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유의사항>

1. ~ 5. (생략)

☐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분류방법)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이 채무자 단위의 총대출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동일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 채무자의 일반대출은 다음 각호의 대출과 일반대출중 연체가 장기인 채권

의 연체기간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한다. < 개정 2000. 7. 14., 2000. 12. 22., 2003. 12. 22 >

1.~5. (생략)

6. 주거용 주택담보대출. 다만, 회수예상가액 대비 대출금액이 과다하거나 담보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등 신속한 채권회수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12. 19.>

7. (생략)

□ 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 등의 업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운용) ① 중앙회장은 이 기준에서 정한 여·수신상품의 범위내에서 상품명칭, 세부업무내용 등을 조합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대출운용기준) ① 대출은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소요기간 및 상환능력 등 종합적인 신용조사를 통하여 적정금액이 지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출은 동일인에게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관련 법령 및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운용한다.

제14조(임직원 대출 등) ① 조합은 해당 조합의 임직원(비상근임원 및 비정규직 제외)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은 가능하다.

1. ~ 2. (생략)

3. 관계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예금,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나. 공제대출

다. 예탁금대출 : 제4호의 범위내

라.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마. 임직원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시공사가 조합을 이주비 또는 중도금대출 기관으로 지정시 해당 이주비 또는 중도금 대출

4. 다음 각목의 소액 대출금

가. 생활안정자금대출 : 2,000만원 이하

나. 주택관련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포함) : 5,000만원 이하

다. 사고금정리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주택관련자금대출 포함) : 6,000만원 이하
(이하 생략)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 기준

목적

1. 이 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동법 제95조에 의거 신용사업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상호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신용사업에 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5조의2에 의거 상호금융기관의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주석공시

45.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기타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가) 우발부채의 유형별 추정금액과 중요한 계류 중인 소송사건 및 중요한 약정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 재무회계개념체계

48. 표현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형식보다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실질은 법적 형식 또는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향유하고 당해 리스자산과 관련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경제적 효익을 향유하는 대가로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 및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리스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이용자는 리스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목적

14.1 이 장의 목적은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주석공시.

14.20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다음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한다.

- (1)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 (2)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 (3) 제3자에 의한 변제의 가능성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략)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2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용협동조합표준정관

제9조(가입) 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가입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법인·단체명)
<2015.8.5. 본호개정>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② 조합은 제1항의 가입신청자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가입 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는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금액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한 경우

다.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자로서 사안이 가벼운 경우

라.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제46조(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①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등을 제재함에 있어서는 <별표 2>의 제재양정기준과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한다.

1. 제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및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과거 제재사실의 유무
2.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금융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3. 제재대상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
4. 사고금의 규모 및 손실에 대한 시정·변상 여부
5. 자진신고, 검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6. 경영방침, 경영시스템의 오류, 금융·경제여건 등 내·외적 요인과 귀책판정과 관계

②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행위 등 특정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별표 3>의 금융업종별·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등 여타 제재기준을 참작하여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등 제재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삭제 <2018. 1. 2.>

② 직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45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장 중한 제재가 정직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③ 직원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주의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 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서 정한 행위자와 감독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위자 : 업무의 성질과 의사결정의 관여정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자
2. 감독자 : 당해 금융기관 직제를 기준으로 행위자에 대해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직제상 감독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위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정한 보조자 및 감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행위자에 대한 제재보다 1단계 내지 3단계 감경할 수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보조자의 위법·부당행위에의 관여 정도

<별표 2>

제재양정기준

위법·부당의 정도 유 형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법령, 관계규정 또는 감독기관 의 명령, 처분, 지시등의 위반	해임권고(면직)	해임권고(면직)~문책 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 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	해임권고(면직)~직 무정지(정직)	문책경고(감봉)~주의 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해 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	해임권고(면직)~문 책경고(감봉)	주의적경고(견책)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 또는 내규 를 위반하거나 충실의무의 위반	"	"	"
직무태만	"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
기타 위법	"	"	"

<별표3>

금융업종별 · 위반유형별 제재양정기준

I -2. 회계 부당처리(상호저축은행은 제외)

1. 제재대상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처리기준 및 개별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회계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

2. 제재기준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 및 규모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분 식 규 모 (규모비율)			
I (기준비율의 8배 이상)	II (4배 이상 8배 미만)	III (2배 이상 4배 미만)	IV (1배 이상 2배 미만)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 1) 규모비율 산정 등 제반사항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의 ‘심사·감리 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준용

2) 신용협동조합법 적용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동 조치양정기준 <표 1>의 규모산출표상 2.규모조정계수의 주식내용 적용을 배제하고, 규모금액이 700억원~300억원인 경우의 규모 조정계수는 “0.8”,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0.6” 으로 한다.

- 회계 부당처리는 회사의 경영방침 등에 기인한 사항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주된 책임자로 제재한다. 다만, 담당 임직원에 주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상근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감독책임(주된책임자보다 감경)을 부과한다.
 - 다만, 감사(위원)가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는 등 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위법행위를 사실상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제재할 수 있다.
- 회계 부당처리의 발생동기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관련임원 문책경고 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기관에 대한 제재를 병과 한다.

3. 가중 및 감경

- 위법행위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기준

- 위법행위를 통하여 BIS 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이 크게 왜곡되어 우리원의 적기시정 조치 대상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관련법규의 위반을 은폐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비자금 조성, 횡령, 배임, 기타 불법자금 세탁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 위법행위가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위법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적 거래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나. 감정기준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없는 비상장 금융회사이거나 회계 부당처리 규모가 미미하여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경우(차액의 50% 이상을 위반금액에서 감액)
- 회계추정의 차이 등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경우(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의하여 계산된 것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제외)
- 우리원에 위법행위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위법행위 사실을 공개한 경우
- 감사착수일 현재 과거의 위법행위로 인한 오류를 차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여 이미 시정한 경우
- 기타 대내외의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법행위가 단순과실로 발생하여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8. 신용협동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가입 <신설 2014.7.23.>

가. 제재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나.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무자격 (준)조합원 가입자수 비율 [전체 (준)조합원 가입자수 대비]	무자격 (준)조합원 가입자수
개선/면직	80% 초과	2,000명 초과
직무정지/정직	50% 초과~80% 이하	1,000명 초과 ~2,000명 이하
문책경고/감봉	30% 초과~50% 이하	300명 초과 ~1,000명 이하
주의적경고/전책	10% 초과~30% 이하	100명 초과 ~300명 이하

주 1) 무자격 조합원 가입자수 비율을 기준으로 양정하되, 무자격조합원 가입자수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의 양정을 적용

2)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무자격조합원 가입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무자격조합원 가입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V-9.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신설 2014.7.23., 개정 2016.2.29., 2020. 5. 13.>

가. 제재대상

- 비조합원에게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는 행위(「신용협동조합법」 제40조)

나. 제재기준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비율 및 금액		제재양정
초과비율	초과금액	
50% 초과	100억원 이상	개선(면직)
15% 초과 ~ 50% 이하	45억원 이상	직무정지(정직) ~ 문책경고(감봉)
5%초과 ~ 15% 이하	15억원 이상	주의적경고(견책)

* 총대출금 대비 초과비율을 기준으로 양정하되, 초과금액 요건을 함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 단계의 양정을 적용

**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으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3억원 이상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비조합원 대출 초과취급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V-10. 상호금융조합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신설 2014.7.23.>

가. 제재대상

-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여 순자본비율이 과대 계상되거나 이로 인하여 적기시정조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 후순위차입금의 자금공여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 등을 통해 부당하게 후순위차입금을 조성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행위(신용협동조합에만 해당)(「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

나. 제재기준

제재의 종류	과대계상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
개선/면직	5%p 이상 변동을 초래한 경우로서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보다 중한 단계의 적기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직무정지/정직	3%p 이상
문책경고/감봉	1.5%p 이상 3%p 미만
주의적경고/전책	0.5%p 초과 1.5%p 미만

주 1)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및 후순위차입금 부당조성 등으로 인한 순자본비율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위반금액을 합산한 비율로 제재한다.

2) 회계년도말(결산기)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의 경우 회계부당처리에 의한 제재기준과 본 기준에 의한 제재기준중 중한 조치로 제재한다.

3) 제재양정수준이 최저 제재양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의 등 조치

다. 가중 및 감경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결과가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가중 제재한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가 전번 검사와 이번 검사에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가중 제재할 수 있다.
-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별표1>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IV. 위법행위 유형 구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 결정과정 등

1. 위법행위의 구분

가.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A유형”이라 한다.)

나.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이나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의 과대·과소계상, 수익·비용의 과대·과소계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 영업·비영업손익간 계정재분류, 유동·비유동항목간 계정재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하 “B유형”이라 한다)

다. 위법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각 항목과 관련한 주식사항인 경우(이하 “C유형”이라 한다)

1) 특수관계자 거래

2)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으로 인하여 발생가능한 자산의 사용이나 처분의 제한 또는 우발부채(다만, 관련 채무잔액의 130% 이내 금액에 한하고, 관련 채무잔액의 130% 초과금액 또는 자신을 위한 담보제공, 질권설정, 지급보증 등과 관련한 금액은 라.에 해당한다)

3)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으로 발생가능한 우발부채

라. 위법행위가 기타 주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가.부터 다.까지의 사항 이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D유형”이라 한다)

2. 중요성 기준금액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중요성 기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중요성 기준금액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외부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감사보고서 첨부한 문서에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중요성 금액(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 표준 중요성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감사인이 중요성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한 경우는

1) 회계법인이 회사별 규모, 상장여부, 감사위험 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요성 금액 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 회사별 중요성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담당 이사의 재량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3) 합리적 근거 없이 표준 중요성 기준 방식의 중요성 금액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위법행위의 수정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법행위의 중요도를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가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판단할 수 있다.

가.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 적용

1) 감사인의 재무제표 전체 중요성 금액을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으로 본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배
- ② B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 ③ C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5배
- ④ D유형 : 감사인의 중요성 기준금액의 15배

나. 표준 중요성 기준 적용

1) 회사의 자산 및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2) 위법행위 유형별 중요성 기준금액

- ① A유형 : 규모금액의 1%
- ② B유형 : 규모금액의 4%
- ③ C유형 : 규모금액의 5%
- ④ D유형 : 규모금액의 15%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국
연 락 처	02-2100-2983	02-3145-8082